

제 1 주 제

충남형 사회적기업의 발전과제에 대한 몇 가지 생각

김제선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충남형 사회적기업의 발전과제에 대한 몇 가지 생각

김제선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poolppuri@gmail.com

1. 충남형 사회적 기업 발전에 대한 접근

- 공적가치관리론과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구축의 관점

○ 신공공관리가 아닌 공적 가치의 창조의 관점

- 결과와 효율성 달성에 대한 우선적 초점이 아니라 공적가치를 창조하여 공공행정의 목적 그 자체를 달성하려는 관점. 단기적 결과보다 관계의 심화, 발전을 중시하는 관점 필요.
-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였는가, 지속가능한 정당성 부여의 환경을 구축하였는가, 지속가능한 운영역량을 구축 하였는가가 중요.
- 조급한 단기적인 정책 목표의 달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모델을 만들어가는 열정과 헌신, 다양한 주체와의 관계성의 발전의 관점이 필요함.

○ 충남지역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구축의 관점

- 복지정책의 유형적 성격의 사회적 기업 인증 기준과 높은 공공주도성이 자립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비정규·저임금 노동자의 양산 체제 비판 유발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중심의 접근은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욕구를 사회적 기업의 기반으로 확충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
- 여러 지역 경제 시책 중의 하나로서 일자리 창출의 연장으로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 만들기',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의 주요 전략으로서 접근 필요.
- 나아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경제의 한 부분에 그친다는 점에서 폭넓은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율성을 가진 다양한 경제활동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촉진하는 접근법이 필요.

2. ‘충남형’사회적기업과 정책 추진 방향

○ 「충남형?」의 문제

- ‘충남형’은 고용노동부 지원 기준 보다 완화하여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준비형이라는 의미?
- ‘충남형’이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사회적 기업이라는 의미?
- 충남지역의 객관적 인문사회 및 자연생태와 경제적 조건과 동시에 도민과 시민사회, 시장, 공공부문의 주체적 역량에 맞춘 특성화 된 주체적 사회적 기업의 추구의 의미로 해석.
- ‘충남형’은 곧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인증의 조건인 취약계층고용 또는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적 요건으로 사회적 기업을 국한하지 않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민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포괄하려는 의지일 것임.(고용노동부형 사회적 기업의 아류의 복제가 아닌 지역사회연계형 사회적 기업의 창조 의지의 표현)
- 따라서 ‘충남형사회적기업’은 고용부의 기준을 넘어서 ‘충남지역 사회문제 해결 및 고용 창출 등 사회적 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해 영업활동 등 수익 창출을 도모하는 기업 및 조직’으로 확장하여 재정의 인식하는 것이 필요.(중앙부처에서도 커뮤니티 비즈니스적 접근이 확산 되는 추세임)
- 지역사회연계형 사회적기업은 민선5기 충남도정의 비전과 전략인 사람투자전략, 충남의 내적 자립적 성장 동력을 키우는 발전 전략의 주요 구성 부분임으로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 순환과 공생의 지역발전 전략과 맞물려 추구 되어야 함.

※안희정 충남도지사 취임사(2010.7.1)

사람투자전략은 건설과 토목 중심의 발전이 아니라 복지, 교육,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을 개선하고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데 국가가 더 많은 지혜와 자원을 투입하자는 것입니다.

지역 발전 전략도 새롭게 변화해야합니다. 전시성 사업에서 벗어나 지방의 내적, 자립적 성장 동력을 키우는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 박진도 충남발원장 충남도민정상회의 기조연설(2010.10.20)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내발적 발전에 좀 더 주력하여야 합니다.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충남도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그 발전의 성과가 지역에 남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수산업의 육성과 지역먹을거리체계의 구축, 지역기반 산업의 육성,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보호 육성,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부문의 활성화 등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 「충남형 사회적기업」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

①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충남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단위사업이 아닌 충남도정 전략 과제로 선택과 집중 필요.

- 취약한 재정여건, 부동산 중심 개발의 한계 노정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구축을 전략과제로 선택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업 재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단위 사업이 아닌 '새로운 충남'을 위한 '행복한 변화'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인지적 도정'이 되도록 '사회적 경제 활성화 관점의 도정전략', '사회적 경제 주류화 전략' 수립과 추진 필요.

② 내생적 발전 전략에 따라 인프라 구축(생태계 구축)에 우선적 투자

- 외형적 사회적 기업의 창업의 수량보다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인적 자원의 양성과 발전, 사회적 경제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 노력 집중 필요.
- 사회적 경제 구축을 위한 혁신역량의 강화, 기업가 정신(이윤 추구가 아닌 지속가능한 창조 정신)의 고양, 잠재적 사회적 기업집단 내부의 학습 능력 배양 등 지속적인 인적 및 사회적 자본의 개발 촉진 등 사회적 경제의 발전역량을 높일 수 있는 토대 마련에 우선적 노력이 필요.
- 지역에 뿌리 내린 양질의 사회적 경제 활동가로 대표되는 인적 자원이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핵심적 과제임으로 지역민의 교육훈련에 집중적 투자 필요.
- 사회적 기업의 인프라가 될 지역연계형 사회적기업 모델의 개발(연구조사), 통합적 충남형 사회적 기업 종합 육성계획의 마련, 중간지원기관의 설립과 육성, 사회적경제 기금의 조성, 사회적경제 유통망의 구축 등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보육에 우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개별 기업 육성보다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자립하는 사회적 기업,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 폭발적인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가능함.

③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의 통합적 모델 구축

- 노령화, 양극화 추세 속에서 취약계층의 소외와 배제를 방지하고 이들을 지역사회와 통합시킬 수 있도록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모델을 구현하여야 함.
- 성장과 분배,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통합적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정책임.

- 시혜성 분배 정책의 한계와 취약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 미래성장 경제정책으로 인식하고 대안모델을 구축하여야 함.
- 사회서비스 수요를 주민 스스로가 생산하고 전달하는 사회적 기업 모델을 발전 시켜야함.

④ 수요자 중심, 상향식 참여를 복돋우는 정책 추진

- 공무원과 전문가가 입안하고 실행하는 정책 공급자 중심, 하향적 사업 방식 대신 실수요자의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고 이들의 참여를 복돋우는 정책거버넌스 구현 필요.
- 정책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민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진행 과정의 투명성과 사업 결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임.

3. 충남형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의 과제

○ 충남형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의 가치와 비전, 전략의 수립

① 충남형사회적기업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조사

- ‘충남지역 사회문제 해결 및 고용 창출 등 사회적 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해 영업활동 등 수익 창출을 도모하는 기업 및 조직’으로 충남형 사회적 기업의 모델 개발
-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의 힘으로 해결 해나가기 위한 광범위한 지역자원의 종합적 조사의 추진
- 충남형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의 구축과 발달을 위한 정책과제 수립
- 충남형 사회적기업정책의 가치와 비전, 전략의 기반 마련

② 폭넓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비전과 전략 합의회의 추진

- 시민사회와 도의회, 직접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비전과 전략 합의회의 개최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 공감대 구축 추진

※ 충남형사회적 기업 정책의 핵심적 가치들

- | | |
|----------------------|------------------------|
| - 도민 스스로의 힘으로 잘사는 충남 | - 협동경제를 통한 삶의 질 제고 |
| - 내생적 발전 | - 주민창안과 주민주도 사회적 경제 |
| - 순환과 공생 | - 마을마다에 협동경제, 사회적기업 육성 |
| - 지역연계(기반)형 사회적 기업 | - 자발적 참여와 주도와 협력적 지원 |

○ 다양한 중간지원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

- 지역사회연계형 사회적 기업 성공의 핵심요인인 사업의 촉발과 사업간 네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중간지원기관의 설립과 운영과 지원 필수적임.
- 진정성과 사업성의 잠재력을 가진 공동체를 발굴하고 사업으로 나가도록 촉발하며 상호 네트워크화할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 중간지원기관의 집중적 육성 필요.
- 지원에 따라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사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협력으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도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중간지원조직의 육성이 우선적으로 필요.
-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의 여건과 주민을 고려한 을 고려한 주체의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개발, 창업과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체활성화, 재정 및 경영 컨설팅,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지원 등 사업지원, 사업화 가능한 지역 자원의 발굴과 자원의 보전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와 현장형 사업모델의 개발 등의 역할을 감당하여야할 것임. 이러한 역할은 분야별로도 종합적으로도 활동이 가능할 것임.
- 중간지원조직은 유사조직인 자활지원기관, 의제21추진협, 복지관, 예비사회적 기업을 보육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귀농지원센터, 마을만들기운동조직은 물론 소상공인지원 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임.
-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다양한 연수와 정책교류네트워크 및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임.

○ 당면 현안 정책 과제

① 개별적 중앙부처의 (유사)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의 유기적 연계와 통합적 토착화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육성사업, 행안부의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농수산식품부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사업 등 각 중앙 부처별 사업(전언에 따르면 현재 234개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함, 충남도 자체 조사 및 통합적 관리 및 사회적 기업 육성과 연계 전략 마련 필요)에 대한 지역차원의 주체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특히 생활공동체의 조직화, 지역성에 바탕을 둔 수익성의 추구, 사회복지사업으로의 분화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여야할 것임.(주민발의 일자리창출사업과 같은 모범적 사례의 발전도 추진)

② 중앙부처의 마을만들기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

- 기존 개별 중앙부처 지원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시설(농촌체험시설, 숙박시설, 정보화 등)과 상품(농산물, 특산물, 농촌관광프로그램 등)이 조성 개발되었지만 사업성과 자발성의 부족으로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농수산식품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마을만들기사업들에는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기업 형태의 조직적 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투자가 충남형사회적기업의 자본적 투자(초기자본)가 되도록 만드는 한편으로 자생적 공동체들이 사회적경제 활동에 나서도록 유기적인 연계활동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것임.
- 기 충청남도에서 추진된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종합적 조사와 평가에 기반하여 충남형사회적기업 육성과 연계할 방안을 마련하여야함.

※중앙부처의 마을만들기 사업

농수산식품부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관광마을사업, 도농교류협력지원사업, 도시민유치지원사업 등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지원사업, 저탄소녹색마을조성사업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조성사업,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소도읍육성종합계획 등
문화관광부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지식경제부	지역산업진흥사업(지역연고산업분야-커뮤니티비즈니스시범사업 등)

③ 충청남도행정지원체계 구축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지자체 이관,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의 연계 및 내생적 발전 전력의 중심 추진력으로서 지역단위 행재정적 지원 조직의 성숙과 관련제도의 정비의 추진 필요.
- 현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육성조례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준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연계 사회적기업, 충남형사회적경제육성의 방향을 포함한 개정 작업이 추진 될 필요가 있음. 특히 개정 조례에는 도민들의 다양한 공동체가 사회적 경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형 협동조합의 참여를 가능토록하여야할 것임.(현재 특수협동조합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입법 논의 중)
- 아울러 시군단위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경제 전담 부서의 설치가 가능토록하고 시군단위 별 중간지원조직 육성을 권고하는 내용도 강화되어야 함.

④ 지역사회연계체제 구축 추진

- 다양한 협력과 인력양성, 조사연구, 창업 및 컨설팅 및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 각 주체들의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자활공동체, (예비)사회적기업, 자립형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사업단,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촉진하는 한편으로 민간기업, 지역대학, 지역금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세부 내용 생략)

⑤ 사회적경제 활동가 양성 교육 훈련과 도민공감대 확산 추진

- 주민공감대의 형성이 정책의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의 일차적 요건임은 공지의 사실. 새로운 지역발전의 대안으로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확충하기 위한 포럼, 포털, 홍보, 아이디어 공모,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이 다양하게 기획되어야 할 것임. 공무원들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충남공무원교육원에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함도 필요함.
- 아울러 자발적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액션런닝 방식의 실천적 교육과정으로서 충남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사회적 경제 활동가의 발굴 훈련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회적 청년창업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충남도 평생학습체계 구축과정에서 사회적경제를 중요한 영역으로 편성하여 나가야 할 것임.

○ 몇가지 우선적 시범사업-사회적 경제의 기반 구축

- 로컬푸드(공동체지원농업 등)
- 지역화폐, 착한쇼핑몰의 구축 모색

<참고문헌>

- 김성훈, 새로운 지역통화시스템을 위한 상상, 풀뿌리사람들 워크숍 자료, 2009
- 김장민, 대안경제체제로서 사회적 경제질서, 새세상연구원, 2009
- 노대명, 한국사회적 경제의 현황과 과제, 2007
- 한국의 사회적 경제운동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2008
- 박진도, 제1차충남도민정상회의 기조연설, 2010
- 송백석, 한국의 사회적 기업 정책: 사회적 경제 모델인가?, 2009
- 신동호, 충남경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2010
- 신명호,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2008
- 안희정, 충남도지사 취임사, 2010
- 염돈민, 지역공동체사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강원발전연구원, 2010
- 윤형근, 사회적 협동경제와 대안적 기업의 모색, 모심과 살림, 2006
- 이관률, 충남지역 향토산업 선정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2008
- 이관술외, 충남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특성과 네트워크 구조, 충남발전연구원, 2009
- 임재영, 충남지역경제10년과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2010
- 임종순, 사회적 기업 인증과 활성화 방안, 대구경북발전연구원, 2007
- 임준홍 외, 충남사회적기업육성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2009
- 장원봉,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 녹색평론 100호, 2008
- 장원봉, 사회적경제의 대안적 개념화, 쟁점과 과제, 2007
- 조성은외, 자활공동체발전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2009
- 지경배외, 강원도 지역사회연계형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2010
- 하승우 지역사회운동과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2008
- 한상일, 사회적 기업과 지역공동체 발전, 창조와 혁신 제3권 1호, 2010
- 홍석빈, 사회적 기업이 지속 성장 가능성, LG Business insight, 2009.5-6월호